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 전개

—1982년과 2001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신 주 백

I. 머리말

II.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III.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IV. 맺음말

I. 머리말

근대 국민국가에서 국민통합의 중요한 기제는 군대와 학교교육이었다. 학교교육은 언어를 일치시키고 역사인식을 통합하여 국민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통일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때 역사교과서는 중요한 매개물이었으므로 국민국가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서술되어 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사서술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일정한 교육방침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국가 간 또는 집단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다. 1982년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문제도 일본정부가 의도하는 역사상과 교과서 집필자의 역사관, 그리고 한국이 생각하는 역사인식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표출되고 확산된 문제였다.

주지하듯이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으로 인해 한일 간에 국민감정이 충돌하고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 경우는 1982년 이외에 2001년에도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매년 일본의 역사교과서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1986년에도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기는 하였지만, 국민감정의 충돌로 이어지면서 외교마찰을 불러일으킬 정도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1982년에 비하면 미미한 파장을 일으킨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2002년부터 매년 제기된 역사교과서 문제는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를 일으킨 ‘새로운 역사교과

서를 만드는 모임' 측이 주도한 교과서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난 이후 2005년의 역사갈등처럼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도 2001년경부터 본격화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82년과 2001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기술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1982년과 2001년 이후의 양상을 각각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한일 간 역사교과서 문제를 언급한 논문은 각 시기의 현행본 교과서를 분석한 논문이 대부분이며, 역사갈등의 史的인 전개과정이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한일 간 역사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전개를 직접 다룬 논문으로는 역사학과 정치학 분야의 글이 있으며,¹⁾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노력의 경과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글도 있다.²⁾ 이 글에서는 한일 양국의 선행 연구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극복함과 동시에, 갈등 및 협의 과정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의 양상과 그것이 갖는 함의를 좀 더 다층적인 면에서 고찰해보겠다.

그래서 제2·3장에서는 1982년과 2001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 비교하면서 그것의 변화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선 분석하겠다. 즉 두 시기에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응과정을 비교하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된 이유를 고찰하며, 달라진 양상이 갖는 의미도 추출해 보겠다. 더불어 1986년 이후와 2002년부터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1982년과 2001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언급하여, 1982년과 2001년을 고비로 역사교과서 문제의 전개 양상이 갖는 특징적인 모습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

1) 君島和彦, 1996 <日本の教科書制度について－発行・編輯・検定採擇のしくみ> 《教科書の思想》(すざわ書店); 辛珠柏, 2001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1965~2001)－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한국근현대사연구》 17; 이원덕, 2005 <한일 과거사 갈등의 구조와 해법 모색> 《세계지역연구논총》 23-2

2) 辛珠柏, 2006 <韓日間 歷史對話의 摸索과 協力모델 찾기(1982~1993)> 《韓日民族問題研究》 11; 정재정, 2006 <韓日の 歷史對話－和解와 相生을 위한 오딧세이> 《일본학연구》 19; 辛珠柏, 2007 <‘동아시아형 교과서대화’의 본격적인 모색과 협력모델 찾기(1993~2006)> 《歷史教育》 101

Ⅱ.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1. 발단과 전개

1982년 역사교과서 문제 이전에 한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놓고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한일 간 협력의 첫 시도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때부터였다. 유네스코는 1965년 인류의 복지증진과 세계평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불행한 역사적 인연을 가진 국가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편향될 수 있는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학술교류를 장려하였다.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와 일본위원회는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렇지만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동경교육대학 교수가 일본의 범위를 상대로 교과서 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일본측 대표단 구성이 어려워지면서 세미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³⁾

이후 한일 간에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학술교류와 시정활동은 10여 년 동안 사실상 중지되었다. 정부 차원의 한국관 시정 활동은 국무총리의 지시로 1975년부터 문교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⁴⁾ 비슷한 시기인 1976년부터 민간 차원의 교류 활동도 시작되었는데, 동경한국연구원에서 조선사연구회 주최로 ‘민족과 역사, 역사교육’이란 심포지엄이 처음 열렸다.⁵⁾

그렇지만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활동 모두 활발하게 전개된 것 같지 않다.⁶⁾ 더구나 ‘是正 活動’이란 일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일본도 국제교육정보센터에서 1958년부터 일방적인 시정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학계는 자국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차치하고 상대방의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분석조차 아직 걸음마 단계였다. 1970년대까지 일본 역사학계의 경우 이에 관해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보

3) 교과서 소송의 역사에 관한 간략한 개요는 君島和彦, 1997 <歴史學は教科書裁判から何を學んだか-32年の成果を確認するために> 《教育》 621를 참조하였다.

4) 大韓民國國會事務處, 《第113回(閉會中) 文教公報委員會會議錄 第2號(1982. 8. 5)》 77

5) 大韓民國國會事務處, 《第113回(閉會中) 文教公報委員會會議錄 第2號(1982. 8. 5)》 4

6) 기본적인 현황은 辛珠柏,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1965~2001)-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219~222 참조.

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부터 불거져 나왔다. 일본 내외 특히 한국의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2001년 및 2005년과 비교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일본 내부의 상황 전개를 간략히 짚어보자.

일본의 문부성은 1982년 6월 25일 1983년에 사용할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검정과정에서 ‘침략’이란 표현을 약화시키려 했다든지, 오키나와전에서 일본군에 주민이 살해당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⁷⁾ 이는 1970년 杉元判決 이래 조금씩 검정이 완화되어 가던 경향에 반기를 든 우익 단체와 보수파 정치인들이 1979년 말부터 재차 교과서를 비판하는 활동을 고조시키고 있던 분위기 속에서 문부성도 검열 같은 검정을 강화하고 있던 도중에 일어난 비판이었다.⁸⁾ 2001년 검정이 후소사(扶桑社) 교과서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교과서 문제의 발단이 1982년과 달랐던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을 즈음에 한국의 언론에서도 일본의 교과서가 “왜곡 투성이”라고 지적하는 비판이 있었다.⁹⁾ 중국에서도 일본이 중국과 조선에 대한 침략 사실을 왜곡하며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¹⁰⁾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대해 일본 언론과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일본 수상은 양국 정부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증진을 통해 우호를 증진하자고 발언하였다. 한국 언론은 이를 두고 “두 얼굴을 드러낸 日 교과서 歪曲”이라고 비판하였다.¹¹⁾

한국정부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였다. 문교부는 1982년

7) 《朝日新聞》 1982. 6. 26 ; 《沖繩タイムズ》 1982. 7. 7.

8) 그 배경을 조금 상세히 언급하면, 1979년 11월 石井一朝는 <新 憂うべき教科書の問題>이란 글에서 교과서 집필자를 공격하였고, 자민당은 《自由新報》에 1980년 1월부터 <いま教科書は-教育正常化への提言>이란 글을 연재하였다. 이렇게 공격적인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 6월의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문부성은 고등학교 《현대사회》에 대한 1981년도 검정과 ‘출판사의 자규제’라는 이름으로 검정을 강화하였다. 이어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1980년 12월 자민당에 교과서문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서의 검정 강화와 채택지구의 광역화를 시도하였으며, 교과서통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教科書制度改革草案>을 확정하였다. 일본 문부성은 1981년 11월 제13기 중앙교육심의회에 교과서문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서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일본 역사교육계에서는 이를 ‘제2차 교과서 공격’이라 말한다. 이상은 社會科教科書執筆者懇談會 編, 1984 《教科書問題とは何か》(未來社) 358~366 ; 君島和彦, 1996 《教科書思想》(すずさわ書店) 162 참조.

9) 《한국일보》 1982년 7월 2일 ; 《동아일보》 1982년 7월 7일

10) 《人民日報》 1982년 7월 20일

11) 《한국일보》 1982년 7월 22일

6월 24일경 주일대사관으로부터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았다. 7월 17일 문교부는 일본의 교과서를 입수하여 국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16종의 교과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였다.¹²⁾

그런데 7월 23일 마쓰노 유키야스(松野幸泰) 일본 국토청 장관이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도 오류가 있다면서 “한일합병의 경우 한국에서는 일본이 침략한 것으로 돼 있는 듯하나 한국의 당시 국내정세 등도 있어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일본의 교과서 기술 내용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주문은 내정간섭이라고 오가와 헤이지(小川平二) 문부상에게 말하기도 하였다.¹³⁾ 그의 부적절한 발언은 한국인의 내재되어 있는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한국의 언론이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기사를 1면에 배당하여 연일 보도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국민 가운데는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에 투석하거나, 일본인의 식당 출입을 금지하고 택시 승차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¹⁴⁾ 국민의 반일감정은 한글학회처럼 전체주의 일본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형태보다는 대단히 직접적이고 공격적이었다.¹⁵⁾

침략과 지배 사실을 왜곡하고 공공연히 옹호하는 일본의 지도층에 대해 한국인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외교문제로 발전해 가기 시작하였다. 일본 문부성은 이를 타개하고자 7월 29일과 30일에 중국과 한국 대사관의 公使에게 교과서 검정의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중국 공사는 오히려 일본의 교과서 검정 내용이 1972년 중일공동성명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불만을 표출하였고, 한국 공사는 정식으로 일본정부에 항의를 표명하였다. 문부성 관계자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설명하며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다. 오가와 문부상은 일본 국회에서 비판의 기술을 다시 수정할 수 없으며, 검정제도를 고칠 생각도 없다고 강경한 거부 자세를 유지하였다.¹⁶⁾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문제의 발단이자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교과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결국 문부성은 검정제

12) 《동아일보》 1982년 7월 22일, 8월 6일

13) 《동아일보》 1982년 7월 24일. 오가와 문부상은 시정 요구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국회에 답변하였다(《동아일보》 1982년 8월 3일). 중국정부도 일본의 역사인식이 중일공동성명과 평화우호조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다시 비판하였다.

14) 《동아일보》 1982년 7월 30일, 7월 29일, 7월 27일, 8월 13일

15) 하지만 국민 일반의 항의행위에서 그동안 정부의 대응과정에 대해 행동으로 비판하는 모습은 없었다. 모든 잘못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辛珠柏,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1965~2001)-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227

16) 社會科教科書執筆者懇談會 編, 《教科書問題とは何か》 368

도를 핑계로 양국의 수정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이제 일본정부로서는 외교라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소극적이고 문제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한국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정당조차, 경제협력자금을 벌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일본과의 외교교섭을 중단하는 한편,¹⁷⁾ 국민여론에 편승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부는 8월 3일 대책회의를 열어 “상당한 각오”를 하고 교과서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하였다.¹⁸⁾ 일본정부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국장급 해명 사절을 파견했지만, 한국정부는 면담조차 거부하여 외교적 과장을 일으켰다.¹⁹⁾ 8월 13일에도 한국정부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한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유감표시’를 일본정부에 전달하였다.²⁰⁾ 한국정부가 잠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이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국민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경제협력자금을 벌리려 대일 유화 제스처를 지속했을 때 돌아올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달리 보면, 전두환정권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8월 3일경부터 대일 강경기조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다.

국회도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와 보조를 맞추었다. 8월 5일 국회 文教公報委員會는 16종의 일본 교과서 가운데 24항목 167곳이 잘못 기술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國史編纂委員會의 報告를 받았다.²¹⁾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고, 교과서를 시정하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는 한편,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지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이때 처음으로 국민에게 알려졌다.

2. 외교적 봉합과 대안인식

그런데 끝도 없이 대립 각을 세울 것 같았던 한일 양국의 여론도 해결책을 모색하는

17) 역사교과서 문제가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던 7월 초 두 나라 외상은 동경에서 만나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때도 교과서문제에 관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한국일보》 1982년 7월 6일).

18) 《동아일보》 1982년 8월 4일. 이러한 사태의 전개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일본 정부였다.

19) 8월 10일 중국에도 문부성과 외무성의 고급관료를 파견했지만, 중국정부는 교과서 기술의 재개정을 요구하였다.

20) 《동아일보》 1982년 8월 13일

21) 朴成壽 엮음, 1982 《일본 교과서와 韓國史의 歪曲》(民知社) 279~319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분석한 요구서가 수록되어 있다.

흐름이 강경 대응 기조 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감정적인 반일을 ‘克日’로 승화시키자는 주장이 8월 초순경부터 제기되었다.²²⁾ 마쓰노 유키야스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국민여론을 선도하고 있던 언론도 8월 중순경부터 우리를 되돌아보려는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전두환 정부로서는 사태를 빨리 진정시켜 정권으로 향할지도 모를 비판을 피하면서 경제협력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서둘러 받을 필요도 있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이었던 노신영은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시정작업은 문교부와 외무부에서 실무적으로 맡아 처리하고, 격앙된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극일운동으로 승화시켜 해결하도록 국민성금에 의한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작업을 시도하였다.²³⁾ 언론에서도 ‘독립기념관에 벽돌 한 개씩을’이란 구호 아래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선도하며 여기에 호응하였고, 정부도 이틈을 이용하여 8월 28일 독립기념관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²⁴⁾

때마침 일본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이 8월 26일에 교과서 “비판에 귀를 기울여 정부의 책임으로 시정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²⁵⁾ 중국정부는 검정의 범위 내에서 한국과 중국정부의 비판을 고려에 넣고 최대한 결정하였다고 발언한 스즈키 젠코 수상의 발언이 모호하며 교과서 시정을 위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비판하였다.²⁶⁾ 한국정부는 1985년 검정에서부터 시정하겠다는 시정의 시기에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받아들였다.²⁷⁾ 9월 27일 한국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분석에 기초하여 ‘즉시 시정’ 항목 19개를 포함하여 모두 45개 항목의 수정·검토사항을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양국 간에 1982년 역사교과서 문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일본정부가 9월 14일에 문부대신의 이름으로 ‘고교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사회과부회’에 한국측 의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조치의 결과 곧, 11월 16일 ‘近隣諸國條項’을 발표하면서였다. 즉 社會科部會에서 “인근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검정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자고 자문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11월 24일 이것을 문부대신의

22) 《동아일보》 1982년 8월 5일 ; 《조선일보》 1982년 8월 12일

23) 2000 《盧信永回顧錄》(고려서적) 323

24) 獨立記念館 編, 1988 《獨立記念館 建立史》 678

25) 《한국일보》 1982년 8월 27일

26) 《한국일보》 1982년 8월 26일

27) 《한국일보》 1982년 8월 27일

담화로 발표하였다.²⁸⁾ 갈등을 유발한 요인이 해소되었거나, 어떻게 해소하지는 전진적인 대안도 없이 상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일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이쯤해서 사태를 봉합하려는 양국 지도층의 암묵적이지만 공통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1982년 11월 근린제국조항이 신설된 이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침략’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부성이 검정 때 수정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5년경부터 침략 대신에 ‘진출’이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 이래 처음 부활한 것이다. 반면에 문부성은 학살자의 숫자를 명기할 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검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한국과 중국정부에 검열적 검정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던 문부성은 일본의 교과서 필자들이 자율수정을 요청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즉 1982년 역사교과서 문제가 아직 진행 중에 있던 9월 4일에 결성된 社會科教科書執筆者懇談會는 문부성 대신에게 주변국에서 제기된 비판점에 대해 집필자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1983년도용 교과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였다. 문부성은 “새로 추가된 검정기준의 적용으로부터 금후 改訂檢定에서 근린 아시아 諸國과의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에 관하여 교과서 상 더욱 배려하도록 제언하고 있는 것이지, ‘正誤改正’이란 수속에 의한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²⁹⁾ 여기에서 한국측이 명확히 이해해야 할 점은 1982년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났을 당시 일본정부는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 검정의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했지만, 문부성에서 검정을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자의적 검정기준 내지는 검정제도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 이외에도, 문부성이 지향하는 역사인식에 잘못이 없다는 점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없다.

그런데 한국정부와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982년에 한국정부가 수정을 요구한 19개 항목 가운데 1983년에 7개 항목, 그 이듬해 8개 항목이 시정되었고, 나머지 4개 항목은

28) 《朝日新聞》 1982년 11월 2일, 11월 24일 ; 《동아일보》 1982년 11월 25일

29) 初等中等教育局教科書檢定課, 1982 <‘歴史教科書’についての文部大臣談話について> 《文部時報》 1267, 88. 실제 문부성의 과장은 “문부성으로서는 검정에서 배려가 결여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침략’도 ‘진출’도 허용 범위 속에 있지, 문부성의 검정에 오류는 없다”라며 집필자들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한다(社會科教科書執筆者懇談會 編, 《教科書問題とは何か》 375).

보류되었다고 알고 있었다.³⁰⁾ 그러나 이것은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가운데 한국 관련 부분만을 일본 외무성이 나름대로 정리하여 한국 외무부에 보낸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고 있는 문부성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일이었으며, 이와 관련한 어떤 공식 서류도 일본정부에는 없었다. 한국사회는 교과서문제에 관한 한 일본의 문부성과 외무성이 다른 기관이며, 역사와 외교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역사교과서 문제에서는 별개의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깨닫는데 이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양국 정부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외교적으로 봉합하였다. 그렇다면 1982년 역사갈등을 목격하고 있던 연구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모색하려 했을까. 아주 다양한 반응이 나왔을 것은 자명하지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집필자와 진보적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반응과 문제제기에 대해 놀라움과 더불어 가해의 문제를 등한시 한 연구경향에 대해 반성적인 흐름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로까지 확산되지 않았다. 가령 그들이 이즈음에 주목하고 있던 서독의 교과서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도 검정을 포함하여 서독의 교과서제도와 교과서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어쩌다 게오르크 에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지만, 국제교과서대화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다.³¹⁾ 오히려 일본의 진보학계와 사회과 교과서 집필자들의 관심은 문부성의 검열적 검정에 대응하여 교과서 검정제 자체를 비판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의 역사학계도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민족사관을 정립하는 것이 극일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다만, 경쟁적인 측면에서 연구의 활성화를 제창하는 대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문제해결을 지향한다는 취지의 대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한 갈등이 한참 고조되어 가고 있던 1982년 7월 말 ~ 8월 초순 경에 한국정부는 양국의 역사학자들로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한때 거론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강경대응기조로 방침을 전환하고, 언론에서 침략의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동연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시간

30) 《조선일보》 1984년 7월 1일 ; 《조선일보》 1993년 2월 12일

31) 天野正治, 1981 <特集 教科書問題 - 世界の教科書はどうなっているか : 西ドイツ> 《季刊教育法》 41 ; 林量倂, 1982 <西ドイツの教科書制度> 《國民教育》 53 ; 太田忠男, 1982 <西ドイツの現代史教科書> 《같은 책》 53

을 끌기 위한 일본의 계략이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방안은 유야무야 되었다.³²⁾ 역사교과서 대화를 진행할 만한 국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는 유효함도 제대로 주목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1983년 11월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독일의 국제 교과서대화에 관한 내용을 분석할 때도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³³⁾

이에 반해 일본의 우익 및 일부 보수세력은 독일과 폴란드 역사교과서 대화에 관한 진실을 비틀어 설명하고, 역사적 진실이 사실대로 밝혀질 수 없음을 증명하여 일본의 침략 사실을 은폐하는데 주력하였다. 예를 들어 니시 요시유키(西義之)는 1945년 소련군이 오늘날 폴란드 영토가 된 오더-나이세강 동쪽에 거주하던 독일인을 ‘추방’한 문제를 ‘이주’로 합의한 서독-폴란드 권고안(1972)과 이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독일 내부의 다양한 논쟁을 소개하며 서독-폴란드 교과서대화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진단하였다.³⁴⁾ 그러나 니시 요시유키는 권고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수많은 의견 차이가 좁혀졌고, 학교교육을 통해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양국 간 친선과 미래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주목하지 않았다.³⁵⁾

3. 일본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의 새로운 시도 -역사교과서 만들기-

문부성의 강화된 검정으로 역사교과서의 기술을 바꿔보려던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과 근린제국조항 신설로 좌절을 맞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교과서를 공격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스스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1983년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이 결집한 ‘教科書正常化國民會議’에 소속된 ‘日本を守る國民會議’(이하 국민회의)는 “다음 세대를 담당할 청소년을 위한 적정한” 일본사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³⁶⁾ 이들은 1985년 5월 《新編日本史》(原書房)을 작성하여 검정

32) 《동아일보》 1982년 8월 2일

33) 文基相, 1983 <獨逸의 歷史教育> 《歷史教育》 34

34) 西義之, 1982 <西ドイツ의 教科書論爭> 《諸君》 14-10

35) 그의 시선에서는 역사교과서 대화가 동서독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36) <新編‘日本史’發刊に關する聲明(1986.5.27)>

을 신청하였다. 문부성은 이듬 해 5월 800여 곳에 검정의견을 붙여 합격시켰다.

1981년 10월에 결성된 국민회의는 昭和천황 재위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적 군사력으로 지키는 방위 문제와, 마음과 정신을 지켜야 하는 교육에 관계된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커다란 문제로 헌법이 있습니다만, 나라를 지키는 근원은 결국 국가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바꿔 말하면 천황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들이 헌법개정을 제창하는데 있어 우선 국가의식, 나아가서는 천황에 연결되는 국체라는 것을 우선 분명하게 확립하는 데서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헌법·방위·교육의 문제는 우선 올바른 국가의식을 말하자면 올바른 애국심의 확립이라는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³⁷⁾

국민회의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에게 역사교과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를 만들기 위한 사상적 흐름을 형성하는 기재였던 것이다. 다음 ‘제3장 1절’에서 언급할 일본사회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2001년 검정을 통과한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가 만들어 후소샤에서 출판한 역사교과서도 마찬가지로의 위치를 점한다는 점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사상적 분위기 조성용 ‘중학교관 교과서’라고 볼 수 있겠다.

《新編日本史》에 대해 한국과 중국 언론은 시정 약속을 어기고 군국주의를 계속 미화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³⁸⁾ 한국과 중국정부의 항의에 일본정부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의 강권 발동으로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의 123곳을 네 차례에 걸쳐 다시 수정하도록 지도하였다.³⁹⁾

그런데 나카소네 수상이 ‘강권 발동’을 하면서까지 검정을 이미 통과한 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수정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카소네 수상은 1986년 들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근린제국의 국민감정에도 적절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을 정도로 이즈음부터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는데 전쟁책임 문제가 큰 장애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외적 배려를 우선하는 형태로 정책전환을 명확히

37) 1984. 7 《日本の息吹》 2. 국민회의의 기관지이다. 당시 운영위원장이었던 黛敏郎이 쓴 글이다.

38) 《한국일보》 1986년 5월 29일, 6월 5일

39) 《新編日本史》는 1987년 31개 교묘에서 8321권이 채택되었다. 原書房은 1987년 10월 《新編國民日本史》라는 ‘보급판’도 출판하였다.

한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후반 들어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증대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이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형성되고 있던 일본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일본 경제인들로서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戰後의 후유증을 치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⁴⁰⁾

반면에 한국과 중국정부가 1982년처럼 강력하게 비판적인 논조를 제기하며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⁴¹⁾ 우익 교과서 1종에 대한 검정 결과였다. 는 점에서 1982년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과 우선 비교될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로서는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국제행사인 아시안게임을 1986년 9월에 무사히 치러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민주화운동 세력도 반독재민주화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을 안착시키면서 가속화시켜야 하는 처지였다. 따라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1종의 교과서만을 가지고 외교 문제화하기에 두 나라 정부 모두 부담이었을 것이다.

Ⅲ.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1. 1990년대 한국과 일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한일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해야 할 상황이 조성되었다. 한국에서는 1987년 6·10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정치적 민주화가 실현되어 갔다. 그것은 독재에 억눌려왔던 개인의 권리와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적 흐름이 뚜렷이 형성되는 계기이자, 정치적 민주화에만 집중되어 왔던 사회적 관심을 다양화하는 전환점이기도 하였다. 때마침 동서독이 통일하고 사회주의 소련이 몰락하면서 전후 세계질서를 이끌어 왔던 냉전체제가 해체되었다. 이데올로기에 따라 편가르기를 하고, 같은 편끼리는 분열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끝난 것이다.⁴²⁾

40) 吉田裕, 1995 《日本人の戦争観》(岩波書店) 167~175

41) 한국정부는 시정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시정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42) 냉전의 해체는 이념적 장벽 때문에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대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현실적 압박감을 해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남북관계가 안정되어 가면서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일본의 진보적인 단체와도 연대하려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 11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지원하는 중심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는 등 독재와 냉전으로 침묵을 강요받았던 대일과거청산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91년 8월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정부를 가해자로 뚜렷이 지목함으로써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은 더욱 본격화하였다. 그녀의 자기고백으로 피해 여성들은 자학과 침묵의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하였고,⁴³⁾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민족문제이자 여성문제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반인권적인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부정하고 회피할 수 없었던 일본정부는 1993년 6월 1994년도용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로 검정을 신청한 9종의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다고 발표하였다.⁴⁴⁾ 8월 4일에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거 정부시절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음을 시인하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정치력을 확보하고 냉전체제가 해체된 후 형성되고 있던 새로운 세계질서의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집권층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⁴⁵⁾

고노담화문이 발표된 직후인 8월 9일 비자민당 출신의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이 출현하였다. 55년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그는 8월 15일 ‘戰沒者追悼式典’에서 수상으로서 처음으로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가해책임을 발언할 정도로 일본의 과거에 대해 비판적 총괄을 시도하려 하였다. 이에 자민당을 비롯한 우익 및 일부 보수세력은 즉각 자학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국가에 긍지를 갖는 일본인 자신의 역사관을 확립해야 한다며 ‘대동아전쟁의 총괄’을 목표로 하는 ‘歴史・檢討委員會’를 8월에 발족시켰다.⁴⁶⁾ 1994년 6월에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이 등장하자 더 한층 위기감을 느낀 자민당 내 우익은 12월에 ‘終戰 50周年 國會議員聯盟’을 결성하고 교과서 검정 기준의 하나인 근린제국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무라야마 내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43) 이 과정에 대해서는 김정란, 2003 <일본군‘위안부’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47~75 참조.

44) 《한국일보》 1993년 5월 13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7종의 1997년도용 교과서 모두에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서술이 등장하였다.

45) 이에 대한 하나의 시사가 《文藝春秋》 1992년 4월호의 132~145에 수록된 答申案, <國際社會における日本の役割(全文)> 이다. 일본 자민당은 PKO법의 제정과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 조사회’를 구성하고 1991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지만, 일본의 집권층이 그리는 미래 사회의 일부를 여기에서 시사받을 수 있다.

46) 이들은 1995년 8월 15일 《大東亞戰爭の總括》(展轉社)를 발행하였다.

1995년 8월 15일에 비록 침략전쟁에 대해 직접 사죄하지 않았지만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아시아인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준 점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들은 1996년 들어 1997년 도용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의 검정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등장하자, 일본의 나쁜 것만 강조한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였다.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이 일본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국익 관념 곧, 국가 관념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행위로 간주하였다.⁴⁷⁾ 그는 1996년 1월부터 《産經新聞》에 ‘教科書が教えない歴史’를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6월 자민당에 ‘明るい日本國會議員連盟’이 결성되는 등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 기술경향을 비판하는 정치조직이 여럿 출현하였다. 《産經新聞》에서도 1997년 1월부터 교과서를 비판하는 특집을 보도하였다.⁴⁸⁾

후지오카 노부카쓰와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등은 1997년 1월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의 발족을 발표하였다(이하 새역모). 새역모의 역사관은 ‘자유주의사관’이다. 후지오카 노부카쓰는 자유주의사관이란 “자율적인 개인에 의한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한 허용하는 사회가 결국 보다 풍부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길이며 실제로도 일본의 근현대사는 그런 노선에 접근하는 정책에 의해서 성공하고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코스를 거쳐 왔다고 보는 사고방법”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사관이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리얼리즘, 건전한 내셔널리즘, 관료주의 비판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⁹⁾

새역모는 기존 교과서가 전후 일본인에게 일본인으로서의 긍지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가의식을 결여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한다.⁵⁰⁾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교육은 한마디로 전전의 역사를 복원시키고, 이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것이다. ‘애국심을 지닌 일본인’을 양성하도록 역사교육도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전통과 문화, 역사인식을 단절시킨 현행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헌법이념을

47) 藤岡信勝, 1997 《‘自虐史觀’の病理》(文藝春秋) 292~294

48) 이상의 움직임에 대한 기초적인 정리는 1997 <中學校歴史教科書批判の經過> 《教科書レポート97》 41, 4~6을 참조하였다.

49) 藤岡信勝, 1995 <近・現代史の授業どう改造するか⑫ 三つの近・現代史像③ - 自由主義史觀 5> 《教育科學社會科教育》 403, 119

50) 이하 새역모의 주장은 박진희, <일본 역사교육의 강화 논리와 정치적 의미(1990년대 초~2007)> (이 책에 수록되어 있음)를 인용하였다.

기본으로 한 교육이념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행 평화헌법은 미 점령기 일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져 강요된 것으로 진전 일본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단절시켰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헌법이념 하에서의 역사교육도 잘못되어 건전한 국민의 식과 자긍심 고취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⁵¹⁾ 여기에 경제력만으로는 세계의 여러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편재해 해외 파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덧붙여졌다.

새역모는 이후 《教科書が教えない歴史》(産経新聞社, 1997), 《國民の歴史》(産経新聞社, 1999)를 대량으로 배포함으로써 여론 형성을 꾀하였다. 그리고 産経新聞社와 관계가 깊은 후소사(扶桑社)란 출판사를 통해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출판하였다. 김정신청본을 시판할 때 《新しい歴史教科書‘つくる會’の主張》(徳間書店, 2001.6)도 출판하였다.

이처럼 1979년 말부터 1982년까지와 달리 1990년대 중후반의 교과서 공격은, 조종자이자 뒷 배경으로 우익 및 일부 보수 정치인, 선전대로써 《산케이신문》 등 우익 보수 언론, 선전 선동의 행동대이자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 비판의 이론대인 새역모라는 삼각 구도를 형성하며 진행되었다. 다음 ‘제2절’과 ‘3절’에서 확인되듯이, 21세기 들어 이들은 새역모에서 역사교과서를 공격하며 일본사회의 보수화와 사상적 흐름을 선도하고, 정치인과 언론의 후원을 받으며 교육기본법 개정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법적·사회적 기정 사실화를 기도해 왔다. 그래서 21세기의 전개양상은 사실상 정치인만이 나섰던 1982년과 완전히 다른 구도에 입각해 이루어졌으며,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일본 내에서의 공방은 누가 더 대중적 이슈를 선점하고 당위성을 장악하느냐의 싸움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새역모를 중심으로 한 일본사회의 움직임 곧,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한국사회는 여기에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개선되어 가고 있던 흐름이었으므로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의 교과서공격이 미칠 파장에 대해 예의 주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사회 전체가 사실상 대책 없이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거나 무관심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유화적인 대일정책도 한국사회가 이렇게 대응한 또 다른 원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51) 일본의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의 입장에서 나카소네 내각의 기여는 ‘자유롭고 정당한 경쟁원리가 가능하며 개성 다양한 교육’을 제안함으로써 국가라는 존재를 전제로 한 개인들의 무한 경쟁이라는 ‘신’ 자유주의적 입장을 교육이론에 침투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카소네 내각 시기에 교육개혁 논의가 1990년대 일본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 축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자세한 것은 박삼현, <1980년대 일본의 교육개혁과 ‘임시교육심의회’> 참조 (미발표).

일본사회가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던 와중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움직임도 있었다. 민간 차원에서 한일 간의 첫 역사교과서 대화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의 국제교과서연구소와 일본의 일한역사교과서연구회 사이에 있었다.⁵²⁾ 이때 쌓인 인맥을 바탕으로 서울시립대학과 동경학예대학 사이에 학생 간의 교류만이 아니라 공동역사교재를 만들기 위한 학술교류가 시작되었다.⁵³⁾ 또한 1997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교재를 개발하여 한일 간 역사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고 협력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⁵⁴⁾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의 국제 교과서대화의 경험을 동북아에 응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갈등을 해소하고 한일 간에 상처난 부위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 강렬한 파열음과 제한적 대안 모색

2000년 4월 새역모에서 중학교 역사와 공민 교과서의 검정을 신청하였다. 이후 후소샤의 교과서가 황국사관에 따라 침략을 미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다.⁵⁵⁾ 한국정부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2000년 8월 말경 “과거사를 왜곡, 축소하는 역사교과서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은 물론 일본 스스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표명한 이래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하였다.⁵⁶⁾ 또한 중국정부도 비판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은 “중·일 양국의 우호관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

52) 자세한 내용은 日韓歴史教科書研究会 編, 1993 《教科書を日韓協力で考える》(大月書店); 國際教科書研究所 編, 1994 《韓·日 歴史教科書 修正の諸問題》(白山資料院); 辛珠柏, <韓日間 歴史對話의 摸索과 協力모델 찾기(1982~1993)> ‘IV장’ 참조.

53) 그들은 학술교류의 결과물을 책으로 출판하였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일본역사교육연구회 공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혜안, 2000); 《日本と韓國の歴史教科書を讀む視點 - 先史時代から現代までの日韓關係史》(梨の木舎, 2000); 歴史教育研究會 編, 《日本と韓國の歴史共通教材をつくる視點 - 先史時代から現代までの日韓關係史》(梨の木舎, 2003)

54) 심포지엄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1998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오름)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심포지엄의 전후 맥락에 대해서는 辛珠柏, <‘동아시아형 교과서대화’의 본격적인 모색과 협력모델 찾기(1993~2006)> ‘제1장’ 참조.

55) 《문화일보》 2000년 7월 1일; 《서울신문》 2000년 8월 11일

56) 《세계일보》 2000년 9월 15일

였고,⁵⁷⁾ 주룽지 총리는 일본정부와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수정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였다.⁵⁸⁾

하지만 새역모는 2001년 2월 24일 제2차 수정본을 문부과학성에 제출하면서 검정 통과를 자신하였다.⁵⁹⁾ 후소샤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에 제출한 검정신청본의 복사본이 돌아다니는 정도였다.⁶⁰⁾ 그들의 호언장담대로 문부과학성은 3월 29일 8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4월 3일에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문부과학상은 새역모의 교과서가 “균형잡힌 내용”이라는 발언까지 하였다.⁶¹⁾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열적 검정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1982년 역사교과서 문제라면, 역사를 왜곡한 세력의 교과서를 통과시키기 위한 검정으로 일어난 사건이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였던 것이다.

우의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에 대해 한국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현하였지만, 4월 6일에도 “한·일 간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⁶²⁾ 이미 악화된 국민 감정, 그리고 1998년 양국 정상간에 합의한 <한일 파트너십공동선언>의 정신에 명백히 어긋나는 데도 불구하고 양국관계의 ‘손상’을 더 우려한 것이다.⁶³⁾

그런데 4월 9일 한국정부는 주일한국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조치를 전격 발표하였다.⁶⁴⁾ 그러면서도 한국정부는 “중국 및 북한과의 공동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한·일 양자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교과서 문제해결을 일본 문화개방과 연계할 계획이 없다”고 기본 대응기조를 확정하였다.⁶⁵⁾

57) 《국민일보》 2001년 2월 28일

58) 《한국일보》 2001년 3월 16일

59) 《중앙일보》 2001년 2월 25일.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들의 지적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지적 현황

	扶桑社	帝國書院	清水書院	教育出版	東京書籍	日本文化出版	日本書籍	大阪書籍
역사	137	29	22	23	18	35	35	13
공민	99	35	35	16	17	34	60	24

* 출처: <http://www.h2.dion.ne.jp/~kyokasho/main01.htm>

60) 《毎日新聞》 2001. 3. 3.

61) 《教科書レポート2002》 46, 126쪽

62) 國會事務處, 《第220回國會(臨時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2001. 4. 6)》 7쪽

63) 중국정부는 4월 4일 “강렬한 분노와 불만”을 표시하였고, 대만과 베트남은 4월 7일, 북한은 8일에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하였다.

64) 사실상 ‘소환’이었지만, 한국정부는 이렇게 비취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며 ‘일시 귀국’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1일 한일경제협회 소속의 일본인 회장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파트너쉽공동선언을 설명하면서 “이번 역사 교과서 검정문제는 이런 공동선언 정신에 비춰 매우 미흡한 데 대해 한국 국민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개진하였다.⁶⁵⁾ 이즈음부터 한국정부의 태도가 강경 쪽으로 급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한국정부의 대응과정은 ‘지나친 신중함’ 내지는 ‘어정쩡한 관망’, 그리고 이어지는 ‘뒤늦은 강경대응’의 양상이었다. 전후 맥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급속한 전환이었다는 점에서는 1982년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⁶⁷⁾

그러는 가운데 원칙적인 대응 방향을 확정한 한국정부는 4월 11일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을 구성하였다.⁶⁸⁾ 대책반은 5월 8일 학계의 협력을 얻어 역사교과서의 왜곡 실태를 조목조목 분석한 35개 항의 ‘수정요구안’을 일본정부에 전달하였다.⁶⁹⁾

대책반에서는 중·장기 대책도 수립해 갔다. 즉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센터’를 설치하여 역사교과서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우리 역사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및 한국관 홍보를 위한 상설기구를 2002년까지 설치하고,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⁷⁰⁾ 센터의 건립과 홍보관의 상설화, 국사교육의 강화는 모두 1982년에도 나왔던 대응방법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이었지만, 1982년에 제시된 대책들을 2001년까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정부가 20년 동안 일본의 한국사에 대한 편향된 역사인식을 사실상 방관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모리 요시로(森喜郎) 일본 총리는 5월 11일 국회에서 한국정부의 수정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일본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⁷¹⁾ 5월 17일 자민당의

65) 《한국일보》 2001년 4월 11일

66) 《세계일보》 2001년 4월 12일

67) 辛珠柏,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1965~2001) -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243.

68) 처음 명칭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대책반’이었다. 그런데 4월 6일자 국회 統一外交通商委員會에서 대책반의 명칭에 ‘문제’가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며 ‘왜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國會議務處, 《第220回國會(臨時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2001.4.6)》 5).

69) 중국정부도 5월 16일 8개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서울신문》 2001년 5월 18일).

70) 《한겨레신문》 2001년 5월 10일, 16일. 그러나 일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교과서 과동에 대응했던 측면도 있다. 가령 일본 교과서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시정요구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세계일보》 1996년 2월 14일).

71) 《每日新聞》 2001년 3월 7일 ; 《朝日新聞》 2001년 5월 9일 ; 《讀賣新聞》 2001년 7월 9일. 《產經新聞》의 논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부 의원은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에 적극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⁷²⁾ 또한 후소샤에서는 6월 1일부터 ‘시판본’이란 이름으로 시중 판매에 나섰다. 한국정부의 수정요구에 대해 7월 2일 “사실 관계의 오류가 아니라 한국민의 감정을 고려하고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친 것”이라며 한국고대사 관련 두 군데를 ‘自主訂正’하였다.⁷³⁾ 후소샤에서 출판한 교과서에 대해서만 25곳의 수정을 요구한 한국정부에 대해 마치 대단한 생색을 낸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침략과 지배를 둘러싼 과거사에 대해 반성할 의도 자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후소샤의 의견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검토 결과를 7월 9일 한국정부에 공식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검정제도와 학설의 다양성을 들어 한국정부의 수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위원회 위원과 역사학자 등 18명이 22일 동안 “한국측 요구를 성의를 갖고 충분히 정밀 검토했다”고 밝혔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학문적인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동시에 검정조사심의위원회에 한국사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검정 이후에도 서술의 오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역사연구 촉진, 한일 학자 및 전문가 교류 활성화, 한국 교직원 초빙, 한국어와 일본어의 상호 학습지원 강화, 한일 간 스포츠·문화 교류 확대라는 5개 항의 ‘한일 신세기 교류 프로젝트’안을 제시하였다.⁷⁴⁾

일본정부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2001년과 같은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안들이었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대책은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한일관계사와 한국사를 편향되게 기술한 역사교과서로 인해 일어난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1982년 일본정부 스스로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근린제국조항을 위반한 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1982년 때처럼 검정제도의 무오류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눈에 일본정부의 대책은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졌다. 한국과 한국인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은 일본정부의 대책이 “잔피의 巧言”이라고 극언하였다.⁷⁵⁾

일본정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던 중 일본이 과거사를 오히려 편향되고 미화한 교과서의 수정을 거부하자 한국의 여론은 폭발하였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적과 조선민주주의

72) 《教科書レポート2002》 46, 127

73) 《한국일보》 2001년 7월 7일. 아홉 군데 가운데 한국 관련은 다섯 군데였다.

74) 《동아일보》 2001년 7월 10일

75) 《세계일보》 2001년 7월 10일

인민공화국적을 가진 희생자들의 야스쿠니신사 합사문제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결부되면서 한국의 대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1987년부터 매년 교류해 오던 한국의 마산 제1고등학교와 일본 미에(三重)현 쓰다(津田)고교 사이의 교류를 한국측이 중단한 것처럼,⁷⁶⁾ 한일 교류를 진행하고 있던 590개 초중등학교 가운데 178개교(30.1%)에서 교류 보류 또는 중지를 결정하였고, 166개교(28.1%)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시정하고 후소샤 교과서의 불채택을 지원 하는 활동을 벌였다.⁷⁷⁾ 물론 이는 잘못된 교육 조치였다.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말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성공한 교류이자 열린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에 후소샤 교과서의 역사왜곡으로 한일 양국 외교관계의 안정이 흔들렸을 때는 교류를 중지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한국인의 대응 태도가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성숙해 갔던 것이다.

이처럼 급속히 달아오른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은 없다. 한국정부는 7월 10일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2. 특히 일본 정부가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까지 왜곡하고 미화하려는 역사기술을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19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역사인식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3.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같은 태도를 감안해 볼 때 일본이 과연 근린제국과의 우호친선관계를 중시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⁷⁸⁾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7월 12일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전체회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공식화하였다. 한국정부는 19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따른 양국간 교류프로그램을 전면 중지하고, 일본 대중가수의 가창음반과 오락용 방송프로그램, 18세 이상 성인용 비디오와 영화,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국제영화제 미수상 애니메이션 등 6개 분야의 제4차 문화개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曺永吉 합참의장의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9월 초 실시키로 했던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 함과 호위함의 인천항 입항을 거부하는 등 한일 군사교류와 안보협력을 중단하기로 하

76) 《문화일보》 2001년 7월 10일

77)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 2001 《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역사비평사)

78) 《세계일보》 2001년 7월 10일. 한국의 국회에서도 7월 18일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였다. 또한 8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각료급 수석 대표를 참석시켜 편향된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⁷⁹⁾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한일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⁸⁰⁾

한편, 양국 정부차원의 교류가 사실상 중지된 상태에서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을 저지하려는 한일 간 시민연대의 움직임에 기대를 거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⁸¹⁾ 1982년과도 확연히 구분되는 대응양상인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2001년 3월부터 가시화하였다. 즉 민간 차원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며 한일간 교류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2001년 3월 14일 5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일본역사교과서개악저지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4월 13일에는 ‘일본역사교과서개악저지운동본부’를 90개 단체가 참가한 상설 연대 기구인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로 전환하였다(이하 운동본부).⁸²⁾ 운동본부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교과서 왜곡문제를 직접, 그리고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에서 결성되었다.

운동본부에서는 8월 15일까지 새역모가 만든 후소샤 교과서의 불채택운동을 한일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저지하였다. 일본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본측과 협력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 항의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 언론에 왜곡된 교과서 불채택을 호소하는 광고 신기 모금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본내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운동본부에서는 새역모를 지지하는 기업 또는 관계자가 새역모에 가입해 있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 우리의 각오를 보여주려 하였다.⁸³⁾

79) 《경향신문》 2001년 7월 13일

80) 그런데 일본의 언론에서는 이미 이즈음 역사대화를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朝日新聞》 2001년 7월 10일 ; 《每日新聞》 2001년 7월 10일. 물론 두 신문은 현행 검정제도를 고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현행 제도를 바꿀 수 없으니 역사인식의 틈을 매울 수 있는 공동연구, 역사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1) 가령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점을 공식 통보한 바로 다음 날인 2001년 7월 10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사설 : 교과서 저지운동에 기대한다>를 들 수 있다.

82) 이상의 내용은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http://www.ilovehistory.or.kr/>).

83) 활동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지방 자치단체간의 연계활동은 한국의 최소 55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참여하였다. 신문의 의견광고는 《朝日新聞》 동경의 일부 지역판에 2001년 9월 27일, 10월 1일, 10월 13일 모두 3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새역모 후원 기업제품의 불매운동은 제한적인 불매운동으로써 모든 일본인이 후소샤 교과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었으나 구체화하지는 못하였다. 이상은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에서 편집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2002 활동보고서》(2002.2)에서 참조하였다.

실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일본 내 여론을 환기시키며 후소야 교과서의 채택을 저지한 활동은 효과를 보였다. 그 결과 10% 채택률을 목표로 했던 새역모의 계획은 0.039%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식을 줄 모르던 국민 여론도 이즈음부터 급속히 식어갔다. 반대로 새역모는 8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교과서에 내포된 문제점은 반성하지 않은 채 외국의 압력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으로 채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4년 후에는 반드시 리벤지(복수)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⁸⁴⁾

새역모의 채택률이 저조해짐에 따라 양국 정부로서는 냉각된 한일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것만을 놓고 보면 2001년 10월 15일 열린 양국의 정상회담이 그 전환점이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한 것이다.⁸⁵⁾

양국간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시민단체에서도 나타났다. 운동본부에서는 후소야 교과서에 대한 불채택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던 2001년 7월 제1차 한일교과서위원회를 열고, 대안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역사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결국 2002년 3월 중국 남경에서 열린 ‘제1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에서 한중일 3국의 시민단체에서 공동교재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⁸⁶⁾ 이들의 활동은 한일 간 역사갈등 해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세계평화를 그르치는 행위임을 알리는 실천적 모습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982년에 볼 수 없었던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새로운 움직임은 내외정세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즉 냉전체제가 와해되며 이념대결이 완화되었고, 민주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한국 시민운동의 기본 역량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김대중 정권이 민주화 과정을 함께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대화를 모색하는데 유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부터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민족주의 비판 특히,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열린

84) 《국민일보》 2001년 8월 17일

85) 한국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1년 12월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편)에서 주무 기관이 되어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86) 이에 대해서는 신주백, <3국 간 국제연대 속에서 비로소 동아시아가 시야에 들어오다 : 한국에서의 『미래를 여는 역사』 편찬 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편, 2008 《동아시아에서 역사인식의 국경 넘기》 (선인) 참조.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된 것과는 연관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자체를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⁸⁷⁾ 민족을 내세우지 말고 민족 대 민족의 대결구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⁸⁸⁾

이밖에 2001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1982년과 비교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몇 가지 있었다.⁸⁹⁾ 첫째, 여전히 과고다공원 등지에서 항의집회가 열리고, 집회에서 화형식을 거행하는 것은 1982년과 일치했지만, 이를 공공연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⁹⁰⁾ 둘째, 1982년에는 관변단체 중심의 항의 시위가 중심이었지만, 2001년 대중의 반일시위는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와 일본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시민단체들의 연대 활동이 그 대표적인 보기일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항의 활동이 있었다. 가령 충청남도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6월 15일에 우리의 기초의회에 해당되는 구마모토현 기쿠치군 기쿠요정(町)의회를 방문하여 왜곡교과서 불채택 활동을 벌인 결과, 기쿠요정의 회로부터 ‘만드는 모임’측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성과를 얻어냈다.⁹¹⁾ 넷째, 늦기는 했지만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벌였다. 1982년에도 북한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공동보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한국 정부는 4월 중순경까지도 공동보조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⁹²⁾ 다섯째,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교과서문제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연구자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조직적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 지향적인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3. 역사 갈등세력과 해결 지향세력간의 年例化한 충돌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을 전후로 동아시아에서의 역사문제는 年例化하는 양상

87) 윤건차, 2001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민간 공동연구부터 하자’> 《新東亞》 7

88) 유혁수, 2001 <재연된 日 역사교과서 파동의 이면> 《뉴스메이커》 409

89) 이하의 내용은 辛珠柏,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1965~2001) -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247~249쪽을 정리한 것이다.

90) 이신우, <시론 : 결의대회식 대처방법> 《문화일보》 2001년 7월 2일

91) 2001.6.27 <자치체가 왜곡교과서 덮는다> 《한겨레 21》 365

92) 《한겨레신문》 2001년 4월 10일

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요한 것만 들어도 2002년 《最新日本史》 교과서의 검정 통과,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후소샤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 2006년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문제, 2007년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독도영유권 표기문제, 2008년 일본의 <중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를 자기 영유권으로 표기한 문제, 2009년 자유사(自由社) 발행 역사교과서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는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2001년 이후 여러 문제들이 교과서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으면서도 점차 독립된 갈등 요인으로 심화되면서 한일 간 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대립의 진폭이 커지고 있다. 영토문제, 바다의 명칭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는 지역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종속변수로부터 독립변수화 하였다.

2001년 이후 역사문제가 독립변수화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본을 ‘보통국가화’하려는 우익과 보수세력의 움직임 때문이었다. 이들은 2001년의 9·11테러와 2002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고백을 빌미 삼아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연하게 보수 우경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 두 사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를 비롯한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의 움직임에 명석을 깔아준 돌발정세였다. 새역모가 2005년판 역사교과서에서 親美反北이란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들어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05년 검정을 통과한 후소샤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갈등은 정부 차원에서도 있었지만, 2001년과 비교할 때 정부 간의 직접적이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2005년 역사교과서 문제는 1982년의 역사교과서 문제 때처럼 한국정부의 정치적 필요와 연관된 경우도 없었다.

2005년 역사교과서 문제는 2001년보다 채택과 불채택 사이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공방전의 주된 긴장관계는 민간 차원에서 한중일이 함께 만든 공동역사교재인 《미래를 여는 역사, 未來を開く歴史, 東亞三國의近現代史》(한겨레신문사, 高文研, 社會科學文獻出版社)를 내세우며 벌어지는 상황에, 한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하며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고, 신문에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불채택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형성되었다.⁹³⁾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전과 달리 주로 민간 차원

93) 예를 들어 시민단체는 6월 5일에 8개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독자의 수정요구안을 일본 대사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2001년보다 더 광범위하게 일본의 신문사에 의견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에서의 대결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다. 국제 교과서협력운동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대결 전선이 넓어져 버거운 측면도 있었지만, 2005년에도 10%를 내세웠던 새역모의 의도를 좌절 시키고 0.4%라는 채택률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민간 차원의 유대와 협력활동의 결과 앞으로의 과급효과는 이전보다 더 클 것이다. 그만큼 갈등의 국면이 넓다는 의미에서 대결구도가 확산되어 간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후소사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면서 동아시아 역사갈등을 해소하려는 세력들은 2002년부터 공동역사교재라는 대안물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2005년에 《조선통신사》(한길사), 《미래를 여는 역사》,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한울아카데미), 그리고 2006년에 《마주보는 한일사》(사계절)와 《한일교류의 역사》(혜안)이 출판되었다. 민간 차원의 노력은 역사교과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협력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이었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교과서 대화의 경험을 볼 때, 민간 차원의 상시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역사교재를 개발하는 활동은 교과서를 놓고 대화하는, 그리고 본격적인 역사대화를 시작하는 정치적 준비이고 사회심리적 준비의 일환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⁹⁴⁾

역사교과서 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은 2002년 5월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5년 3월 동경에서 열린 제6회 전체회의 때까지 진행되었고, 다섯 권의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제1기 활동을 끝마쳤다. 같은 기간 동안 공동연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관계자, 공동연구위원회의 위원, 기타 민간측 관계자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의 역사공동연구지원위원회도 활동하였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민간 연구자를 중심으로 전체회의와 3개 분과위원회(고대사, 중 근세사, 근 현대사)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19개의 공동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3년 동안 45차례의 분과별 발표 및 토론회와 한 차례의 공동연구발표회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한일 간 공동연구는 양측에서 19개 주제에 대해 각각 논문을 발표하여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 수록했으며,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있다.⁹⁵⁾ 한국측의 경우 공동연구

록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讀賣新聞》 전국판, 《朝日新聞》 도쿄판을 비롯하여 10개 신문에 7월 22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14회 광고를 게재하였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5 활동보고서》(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6)

94) 자세한 내용은 辛珠柏, <‘동아시아형 교과서대화’의 본격적인 모색과 협력모델 찾기(1993~2006)>, ‘제4장’ 참조. 이하 상세한 언급도 위의 논문 참조.

주제와 관련된 소주제를 89개 선정하여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韓日關係史研究論集 1~10》(경인문화사, 2005)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애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2기 위원회에서까지 일본측의 반대로 교과서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한 점은 정부 차원의 역사교과서 대화가 지닌 잠정적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에서 역사와 외교를 분리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 결과가 양국의 교육기구와 직접 연결되어 참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한계도 여전히 노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역사교과서 대화 기구는 ‘보협’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장차 양국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주변국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새역모와 같은 갈등 지향의 조직에서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설립을 반대하였다.⁹⁶⁾

IV. 맺음말

이상으로 한일간 역사교과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1982년과 2001년의 전개과정을 비교하며 정부와 민간 차원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82년과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어난 계기가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본과 주변국 사이에 외교문제화 하였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민족의 역사인식과 다른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서술 내용은 19년이란 시간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치점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의 침략과 지배와 관련된 인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문제였다.

두 가지 일치점은 기본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대일 과거청산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매우 취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침략책임과 전쟁책임을 전면적

95) http://www.mofat.go.kr/ek/kor_paper.html

96) 후지오카 노부카쓰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활동이 끝나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서술이 늘어나면서 ‘후소사효과’가 상쇄되고 다시 ‘좌익선풍’이 불지 모른다면서 위원회의 발족을 반대하였다. 新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 編, 2003 《新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が問う日本のビジョン》(扶桑社) 214~216

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동경재판사관’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과와 반성도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고, 부적절한 발언이 재생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반복되는 부적절한 발언과 역사교과서 문제는 한국인과 중국인 등에게 ‘제2의 가해’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비록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있지만, 역사교과서 문제가 되풀이 된다는 것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거나, 최소한 감정이 호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긴 호흡을 갖고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역사대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본문에서 보았듯이,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1982년과 2001년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까지만 해도 한일 양국 어느 쪽도 역사 서술에 대해 상호 교류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저 일방통행식이었다.

그러나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난 이후 화해와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시작되었고, 지금은 그 성과가 미약하지만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두 활동 모두 제한적이지만 가능성을 현실화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안을 모색하며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은 한일 간의 교류 추세와도 일치한다. 2009년에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40%가량이 일본인이 될 전망이다. 한일 교류는 21세기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교류가 다양한 영역에서 다층적으로 확산될수록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역사교과서 대화도 기여할 수 있다.

[비평문]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I.

1. 1982년 이전의 단계에서 양국 간에 역사 교과서 문제가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줄고 제 2장 부분의 이미지와 겹치며 재확인 가능하였다. 다만 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한다. 이 점은 1982년 이후 문제화되어 간 과정에 관한 논점이다. 실제 본 논문에서는 1982년과 2001년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부제에는 굳이 1945년부터라고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컨대 고찰의 시점을 어디에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문제이다.

2. 첫머리에서 국민국가 형성과 역사 교육의 불가분성에 대해 굳이 확인하고 있다. 이 일반적인 규정은 전적으로 일본 쪽에만 향하여 있는 듯이 보이는데 저지는 한국 쪽에도 미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한국 내에서의 민족주의의 상대화 움직임을 언급하는 한편 ‘つくる會教科書’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시민 단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실감과는 맞지 않다. 일본의 국내 여론·학교 현장도 ‘つくる會教科書’에는 냉담하였는데, 단적으로 말하여 고등학교 수험용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3.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1982년의 교과서 문제의 배경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 ‘문부성도 검열 같은 검정을 강화하고 있던 도중’이라는 것은 정말인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가. ‘2001년도 검정이 扶桑社 교과서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도 마찬가지로이다. 결과론이 아닌가. 사건으로는 정부·여당(자민당)과 관료 기구로서의 문부성은 나누어 생각하는 편이 좋다. 문부성에 대한 과대평가가 된다.

4. 개념에 대하여. ‘우익 및 일부 보수 정치인’에 대해 대상의 윤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익에 대해서는 단순히 내셔널리스트라고 하면, 줄고에서 지적한대로 좌익(진보파)도 내셔널리스트였다. 그렇다면 우익=내셔널리스트는 개념 규정으로서 성립되지 않게 된다. 확실히 공격적인 용어로서 ‘우익’, 요컨대 그렇게 분류된 집단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부에 알력까지도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는 것은 줄고에서 지적한대로인데, 다룰 때 주의가 필요한 개념이다.

II.

교과서(교육)는 그 나라의 정치·사회·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과서(교육)와 학술 연구 또는 교과서와 제도의 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 간에 차이가 있음은 각 나라의 사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여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이 차이를 서로가 반드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평자들은 금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한일 양측 관계자가 서로의 제도와 역사적 경위를 서로 이해하는 것도 역사 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평자는 이해한다.

본 비평의 대상이 되는 신주백의 논문은 1982년과 2001년의 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상호 간의 정치 과정을 다이나믹하게 분석한 것이다. 앞서 말한 관점에서 신주백의 논문을 보면, 논지도 명쾌하고 한국 내의 동향에 대해 평자가 새롭게 고쳐 인식한 점도 많아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 국내의 분석에 대해서, 평자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점도 적지 않았다. 자료적 제약에 기인하는 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해서도 다음 네 가지 점에 대해 신주백씨의 견해를 묻고 싶다.

1. 일본은 검정 제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의 교과서가 존재한다. 한일 양국 사이에 문제가 된 것은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이러한 일부 교과서가 일본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다른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2. (1)과 관련하여, 일본의 교과서 제도에서는 민간 출판사가 편집한 교과서를 문부성이 심사(검정)한다. 이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완전히 문부성(일본 정부)이 결정할 수는 없다. 일례를 들자면, 같은 검정을 받은 교과서라도 교과서에 따라 ‘侵出’, ‘進出’ 등으로 표현이 다른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문부성(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술이 보인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 1982년(昭和 57년)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같은 해 교과서 검정에 의해 ‘侵略’이라는 표현이 ‘進出’로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는, 현재 일본에서는 오보였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본 논문을 읽으면, 바뀌 쓰게 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3)과 관련하여 전후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기술을 분석한 고야마 츠네미(小山常實) 저 《歴史教科書の歴史》(草思社, 2001)에 따르면, 이미 1978년(昭和 53년) 무렵부터 교과서에는 ‘侵略’, ‘侵出’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선행 연구와 다른 사실 인식이 보인다. 근거를 명시하기를 바란다.

(본 비평문은 I 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히로유키(福島寛之) 협력자, II 에 대해서는 이시다 마사하루(石田雅春) 협력자의 원안 기초에 의거하여 연구위원인 나가시마가 작성을 담당했다.)

[집필자 답변]

일본의 교과서 발행제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정제가 아니라 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검정제에 입각한 교과서 발행제도의 폭은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넓다. 일본의 교과서 檢定史를 보더라도 그 운영의 폭이 넓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 있는 검정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어폐가 있다. 교과서 검정조사관제도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정조사관은 문부(과학)성의 직원이고 지휘를 받아 왔다. 문부(과학)성은 하나의 획일화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집단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분명히 있다. 천황제를 옹호하고 강화하려 하며, 침략과 지배 사실을 되도록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전후책임에 대한 의식이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 검정조사관들이 이점을 모르고 교과서 발행제도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또한 검정조사관과 검정조사심의회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 명쾌하고 광범위하게 알려진 적은 없지만, 검정조사관의 조사와 분석이 심의회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2007년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오키나와전투에 관한 기술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검정조사관은 자신의 학문적 양심과 교육적 양식에 입각해서만 원칙을 갖고 교과서 검정을 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내용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학문적 성과가 없었고, 각 교과서의 주요 필진조차 그다지 바뀌지 않았는데도 1997년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기술한 내용이 2002년 및 2006년판 교과서에서 부정되거나 배제된 점이 이를 시사한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 경향이 상당히 급격히 바뀌었다는 점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교과서 기술의 후퇴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고노발언과 무라야마담화를 부정하는 자민당과 우익의 정치인들이었고, 나팔수 역할을 했던 집단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과 산케이신문이었다.

‘새역모’는 채택률 10%를 목표로 움직임인 집단이었다. 심지어 기자회견장에서 ‘리벤지(복수)’하겠다고까지 발언한 사람들이었다. ‘새역모’는 채택률에서 동경서적 교과서를 앞서 역사교과서 시장을 주도하려 했던 의도를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이를 전제로 10% 채택률을 목표로 움직였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한일 시민단체가 연

대하여 2001년과 2005년의 교과서 채택싸움에서 ‘새역모’의 목표를 저지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한일관계사에서 갖는 의미와 미래지향적인 내포성을 찾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